

64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 군 성폭력과 민주주의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군 성폭력과 민주주의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01

D.P.가 전한 ‘사실’:  
폭력의 재생산 구조

요즘 세간의 주목을 받는 드라마가 있다. D.P., 탈영병을 잡는 군무이탈 체포조를 소재로 한 웹드라마이다. 이 드라마는 탈영병의 사연을 통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폭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병역을 둘러싼 여러 차별과 불평등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 의무) “대한민국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모든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공평’하게 수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주었다. 집안의 배경을 이용해 군 복무를 하지 않거나 군 복무를 하더라도 ‘낙하산’으로 보직을 맡는 등 병역의 의무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치매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탈영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통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도 얼마나 차별적인지 재확인했다. 군 복무를 둘러싼 여러 형태의 차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드라마는 폭력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준다. D.P.의 후반부에서 폭력의 가해자는 왜 그랬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답한다. 폭력이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하는 것이다. 상명하복과 위계가 군 조직 운영의 원리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불합리한 명령이어도 따를 수밖에 없고, 폭력조차도 군기를 잡는다는 명분 하에 수용된다. 군을 운영하기 위해, 전쟁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군기가 세워져야 하고 그 군기는 엄격한 위계에 복종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권력구조 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군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폭력이든 불합리한 명령이든 당연하게 수용되고 다시 재생산된다. 그리고 폭력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해도 개인의 의지만으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고, 폭력에 저항하거나 이를 문제제기해도, 폭력으로 인한 극악한 피해가 발생해도 군 조직의 안위와 안보라는 명분 하에 묵인된다. 폭력에 침묵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힘의 연대가 폭력을 재생산하고 군의 변화를 막는다. 결국 폭력은 권력과 위계적 구조의 문제인 것이다.

폭력의 재생산 구조는 군대 내/외의 성폭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성폭력 역시 성차별적 구조, 위계가 원인이 된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뿐 아니라 성폭력 자체가 권력의 문제이다. 사회에 존재하는 젠더위계와 권력이 성폭력 발생의 원인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폭력의

---

본질은 폭력이 발생하고 재생산되는 구조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 글은 성폭력이 왜 민주주의 문제인지를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군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왜 필수불가결한 조건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 02

## 군 성폭력 실태

지난 몇 달 사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 이 사건들 외에도 그 전부터 군 성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사건이 있어 왔다. 이처럼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공론화한 사건들도 있지만 신고되지 않은 성폭력 사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군 성폭력이 가시화하고 사회적으로 문제화하면서 군은 주기적으로 군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것을 통해 실태를 추측할 수 있는데,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일부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시점 1년 전까지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 간부는 20.8%, 남성 간부는 3.1%,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간부는 2.8%, 남성 간부는 0.5%이다.<sup>1)</sup>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20년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771건, 월평균 64건이었다고 한다.<sup>2)</sup> 이러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군 성폭력 사건 수는 전체 사건 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사에서 응답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군의 처리 사건 외에 신고하지 않은 사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사는 되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병사의 성폭력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신체적 접촉, 원하지 않는 음담패설,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 지시 등의 성폭력이 있다.<sup>3)</sup>

군대 내 성폭력은 범죄의 발생도 문제지만 범죄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최근 보도되었던 사건들은 사건 이후 보복이나 은폐, 합의 종용 등 2차 피해를 건디기 어려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들이다. 성폭력 피해 자체의 심각성도 문제지만 성폭력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피해자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된 사건들처럼 사건 이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2021년 6월

- 1) “성폭력 피해” 여군 10명 중 4명 신고나 상의할 엄두도 못냈다”, 서울신문, 2021년 6월 8일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09005002>
- 2) “군 성범죄 피해자 절반 이상이 5년차 미만… 가해자는 상관”, 한겨레, 2021년 6월 21일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00227.html>
- 3) 서동광, “군대 내 성폭력 피해 병사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20년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사건은 총 471건이고, 이 사건들의 실형선고율은 1%로 471건 중 5건뿐이다.<sup>4)</sup> 이러한 수치는 과연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질문을 남긴다.

군 성폭력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보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군인의 47.1%가 ‘관련자와 상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하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했고, ‘고민은 했지만 포기를 했다’는 응답이 33.2%였다.<sup>5)</sup> 이처럼 사건이 발생해도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고, 이는 군 조직의 문화와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군 밖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쉽지 않지만 군이 갖는 특성이 이를 더욱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D.P.에서 보여준 것처럼 조직의 안위가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하고, 사건을 묵인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려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1년 사이 208%가 늘어난 군 성폭력, 실형선고는 1%뿐”, 경향신문, 2021년 6월 14일자,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6141010001>

5) “‘성폭력 피해’ 여군 10명 중 4명 신고나 상의할 엄두도 못냈다”, 서울신문, 2021년 6월 8일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09005002>

## 03

구조적 폭력으로서  
군 성폭력

1993년 UN 제48차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폭력철폐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하 젠더폭력)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 선언은 여성폭력을 “공적 또는 사적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해악이나 고통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행위,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압 및 자유의 박탈”로 정의한다.<sup>6)</sup> 젠더폭력의 정의에서 주목할 것은 ‘젠더에 기반한’이다. 젠더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규정된 성별, 즉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이라는 것으로 규정되는 개념이 아니다. 조안 스콧(Joan Scott)이 정의한 것처럼 젠더는 권력이 지속되고 순환되는 장이며, 사회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원리로 작동한다.<sup>7)</sup>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젠더폭력은 권력과 성차별적 구조에 의한 폭력이다. 그런 점에서 젠더폭력은 단순히 여성폭력, 남성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차별적 구조, 젠더 위계, 가부장주의에 의한 젠더 규범 등을 문제화하는 것이며 젠더, 섹슈얼리티, 경제적 지위, 학력, 장애, 이주, 인종 등 다양한 위치가 교차하는 지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젠더폭력의 속성은 군 성폭력 사건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2021년 6월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군인의 절대 다수가 20대 초반인 중사·하사(58.6%)였고, 군무원 13.8%, 대위 12.6%, 중위·소위 9.2%였다. 그리고 피해 경험이 있는 중사·하사, 군무원은 군 경력이 5년차 미만이었다. 남성군인 가해자는 선임부사관 50.6%, 영관장교 23%라고 했다.<sup>8)</sup>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군의 위계구조는 성폭력 피해를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상급자의 절대적 지휘권한과 승진·보직 등의 인사권이 성폭력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상명하복과 계급에 따른 위계 역시 군 성폭력이 발생하게 하는 구조이다. 게다가 절대적으로 소수인 여성군인의 상황, 계급적으로 하위 구조에 있는 여성군인의 위치 등이 여성군인의

6) 김정혜·조영주·추지현·김효정·정수연, 「젠더폭력정책에서 보호담론의 한계와 정책 방향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7) Scott, W. Joan.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8) “군 성범죄 피해자 절반 이상이 5년차 미만… 가해자는 상관”, 한겨레, 2021년 6월 21일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00227.html>

---

취약성을 더욱 강화한다. 연령, 계급, 성별 등이 군 성폭력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군인이 처한 상황과 구조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도 어렵게 만든다. 대응을 했을 때 보복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대응을 하여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여성피해자의 신원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 계급과 출신을 배경으로 한 남성군인 간의 연대는 여성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를 양산한다. 최근 사건들처럼 동료와 가족들의 합의 종용, 신원 노출, 협박 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가해자와 분리를 위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더라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남성들 간의 연대로 인해 피해자의 신분은 쉽게 노출된다. 더욱이 여성군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군 조직에서 정기인사 외의 발령은 전출 온 여성군인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나게 한다.

군 성폭력을 묵인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게 되는 상황, 피해자가 피해를 피할 수 없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데는 군의 인사제도와도 관련성이 있다.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의 계급 구조에서 군은 계급에 따라 정년 연령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중사는 45세, 상사는 53세, 원사는 55세, 대위는 43세, 소령은 45세, 중령은 53세, 대령은 56세로, 상위계급으로 진급을 해야 정년이 연장된다. 군에서 승진은 정년 연령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급자의 인사권한은 절대적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급자의 성폭력 가해를 문제제기하기 어렵게 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 작성을 종용받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가해 남성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징계나 처벌로 인해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군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남성동료와 가족들로 하여금 합의와 종용, 협박 등과 같은 2차 가해를 유발하게 한다. 이러한 군의 위계와 절대적 권력의 작동 구조, 이데올로기는 군 성폭력 문제를 심화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적 대응과 동료들의 지지를 어렵게 만든다.

또한 분단 상황으로 인한 안보 논리와 국방·안보 영역에 대한 민주적 개입의 어려움이 군 성폭력 문제를 더욱 심화한다. 안보를 위해 군조직의 안위가 중요하다는 논리가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게 한다. 그리고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2021년에 보도된 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대 여성 하사에게 사격자세를 취하게 한 후 1분여간 꺼안 듯이 양팔을 붙잡은 상관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개개인마다 다른 감수성에 치우쳐 추행의 문제로 보게 되면 위험한 무기를 다루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군대에서 복무하는 개개인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군조직 운영도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었다.<sup>9)</sup> 군 조직 운영의 원리가 피해자중심주의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

9) “피해자 감수성에 치우쳐 추행 판단하면 군 조직 운영 어렵다”는 군사법원, 경향신문, 2021년 6월 9일자.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6091728001#c2b](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6091728001#c2b)

---

이러한 군 성폭력의 경험적 실태는 군 조직의 위계구조와 권력, 그에 따른 비민주적 소통구조가 군 성폭력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문화 역시 중요한 원인이다. 국방, 안보 영역이 남성에게 적합하다는 논리에 따른 남성 다수의 군 조직 구성, 여성군인의 낮은 지위,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등이 군의 제도와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강화한다. 또한 안보라는 미명 하에 군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외부의 개입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군 성폭력 처리를 어렵게 만든다. 결국 군 내부의 비민주적인 위계구조, 군에 대한 민주적 개입을 어렵게 만드는 안보 논리 등 국방과 군을 둘러싼 비민주성이 군 성폭력 양산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 04

## 군 성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건으로서 민주주의 실현

군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무수한 성폭력 사건과 아주 동떨어져 있는, 특이한 사례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군 밖에서 발생하는 여타의 성폭력 사건들도 조직의 위계적, 비민주적 문화와 구조, 권력이 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성폭력은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위계와 권력, 문화, 이데올로기가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것이다. 게다가 국방영역이 갖는 폐쇄성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군 성폭력 발생의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결국 군 성폭력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특히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직 운영을 위해 구성된 계급과 직급은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적 구조일 뿐이라는 인식 하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주적 소통이 가능한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조직 내 문제 해결에 있어 피해자 혹은 소수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피해자 혹은 소수자가 자신의 경험과 피해를 말할 수 있는 문화와 함께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군 조직 내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소통 구조 마련은 군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가 된다. 그리고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개인이 아닌 구성원이 함께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군 조직을 민주화하기 위한 노력이 군 내부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국방과 안보 영역이 갖는 특권적 지위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군 성폭력과 병사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민관군합동위원회가 제안하고 가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군인도 시민으로서 정당하게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범죄, 비군사 범죄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넘어 군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을 투명하게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부의 문제제기와 외부의 개입을 어렵게 만드는 안보와 국방 영역의 특성이라는 명분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실제로 군과 관련한 모든 사실이 안보를 위해 숨겨져야 하는 것인지부터 논의가 되어야 하고 군의 개혁을 위한 민주적 개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

방안들이 모색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군을 비롯한 많은 조직이 조직의 안위를 지키는 방법으로 침묵과 은폐, 축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의 일련의 사건과 대응으로 인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조직의 발전과 안위는 제대로 된 문제 해결과 민주적 소통을 통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성폭력의 원인이 되는 성차별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에 존재하는 젠더위계와 성차별이 젠더폭력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국방·안보 영역은 남성의 분야라는 성별분업 구조가 여성군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야기하는 원인이기도 하기에 성별분업과 차별, 위계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일상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군 성폭력과 민주주의

##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21년 9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